‘昌風’ 맞은 범여 후보단일화 ‘급물살’

鄭 “반부패연석회의” 李·文 “개헌·연정” 제시

세 후보 공감대는 형성…각론 놓고 힘겨루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범여권 대선 주자들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수 진영의 분열을 계기로 범여권이 ‘단일대오’를 꾸린다면 민주·개혁세력의 결집을 통해 정권창출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정동영 민주신당 후보가 5일 ‘반부패연석회의’ 구성을 주장하며 범여권 후보단일화에 나섰다.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는 한편, 범여권 후보단일화의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정 후보의 연석회의 주장에 TV 토론을 역제안했으며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도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연정(聯政)을 후보단일화 의제로 제시했다.

세 후보 모두 직접적으로 ‘후보단일화’라는 용어를 피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후보단일화를 놓고 각 진영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범여권의 후보단일화 논의는 각 정당의 내년 총선 문제가 겹쳐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를 반영하듯 범여권 최대세력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 후보는 세력통합을 외치고 있고 이에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문 후보는 권력분점론을 전제로 하는 연정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의 이 후보 측은 호남이라는 지지기반이 겹치는 탓에 신당과의 세력 통합은 피하면서 선거 공조와 공동정부 구성 등 연정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도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후보단일화에 대한 여론의 압력에 따라 조만간 절충점을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범여권이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개헌 논의를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세력통합보다는 공동정부 구성이나 권력분점을 전제로 한 후보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세력통합보다는 공동 정부를 구성하는 연정 논의가 상대적으로 합의점을 찾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 후보단일화는 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방식보다는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방식이 더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과거 범여권 유력 대선 후보였던 고건 전 국무총리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역할론이 제기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 전 총리와 정 전 총장이 보수 회귀를 반대한다는 명분 아래 후보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대선 정국의 흐름으로 범여권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범여권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막후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민주·개혁세력의 결집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합 민주신당 핵심 관계자는 “고 전 총리와 정 전 총장 측과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지만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범여권의 결집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고 전 총리와 정 전 총장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가 5일 오전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손학규 공동선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5일 오전 광주 동구 대인시장을 찾아 시장상인들을 만나 악수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일화 마지막 기회”

민주 최인기·이상열 의원

범여권 후보단일화 앞장

민주당의 전남지역 국회의원인 최인기 의원(나주·화순)과 이상열 의원(목포시)이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후보단일화 및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는 오는 8일 국회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범여권 후보단일화 및 민주신당과의 통합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이상열 의원도 5일 오후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만나 후보단일화 및 통합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최인기 원내대표와 이상열 의원은 6일 오전 박상천 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후보단일화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당 대 당 통합 문제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오는 8일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범여권 후보단일화 및 범여권 대통합 등에 대해 거론할 예정”이라며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여권 후보단일화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 의원도 “보수 세력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기는 범여권에 마지막 기회”라며 “후보단일화는 물론이고 당 대 당 통합 등을 통해 민주·개혁세력의 정권 재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인기 원내대표와 이상열 의원은 민주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치적 결단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BBK 문제되면 대통령직 걸고 책임질 것”

이명박후보 관훈클럽 토론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5일 자신의 ‘BBK 주가조작’ 연루의혹과 관련,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에게) BBK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뭐가 답답해 주가조작을 하는데 끼어들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BBK 의혹을 제기하는데) 간단한 문제이고 나는 관련이 없다. 있다면 피해를 본 5천여명의 주주들이 왜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면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길 기다릴 것이며, 나로서는 무한책임을 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범여권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하면서 “BBK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가 들어오면 검찰이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어 친형과 처남 소유 회사 ‘다스’의 실소유 의혹 논란과 관련, ‘실소유 주로 밝혀지면 후보직을 사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청와대와 국세청이 끼어들고, 국세청은 제 주위 사람 97명을 수백 회나 다루는 등 샅샅이 뒤졌다”면서 “그 정도 조사하고 공격을 받았는데 아무 것도 안 나오고 내가 건재한 것을 보면 내가 삶을 제대로 건전하게 살았다는 뜻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전 총재 출마 움직임과 관련, 이 후보는 “한국 정치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 전 총재를 믿어 한 점 의심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 대비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본인이 고심 중이라니까 위로도 하고 설득도 하는 노력을 당과 함께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재오 최고위원의 ‘좌시하지 않겠다’ 발언 논란에 언급, “당의 화합을 깨는 언행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싸워야 할 상대가 있는 만큼 적전에서 단합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서남권특별법 “특정지역 특혜” 한나라 위원장 반대

F1 특별법 경주특별법과 연계 놓고 의견 대립

■광주·전남 현안 4개 법안 어떻게 돼가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현안 법률안 통과에 비상이 걸렸다. 각각의 법안에 대해 범여권과 한나라당의 의견이 엇갈릴 뿐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달라 어느 하나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정치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4개 법안 모두에 대한 심의 자체를 보이콧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된다.

◇서남권 특별법=상임위인 국회 건교위는 아직 법안심사소위 의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이상열(목포) 의원은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 내 분위기가 전보다 좋아지고 있어 심의에 들어가기만 하면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낙관했다.

걸림돌은 한나라당 윤두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의 반대. 윤 위원장은 서남권특별법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여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또 연안개발특별법과의 연계 통과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서남권특별법은 연안개발특별법과 달리 막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F1 특별법=국회 문광위 역시 법안심사소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대통합신당에서는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경주역사도시 특별법’과의 연계 통과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대통합신당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통합신당 유선호(장흥·영암) 의원은 경주특별법과 연계를 하더라도 통과시키려 하지만 지병문(광주남) 의원 등은 연계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유 의원 측은 경주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광주문화수도 건설에 대한 지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연계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 의원 등은 경주특별법 통과는 광주 문화수도의 위상을 저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광주에 피해를 끼치게된다며 연계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광주과기원법 개정안=과학기술부는 오는 8일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광주과기원 학부 과정 신설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국회 과기정위는 오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염동연(광주 서갑) 의원이 통과를 적극 밀고 있어 해당 상임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남대와 조선대 등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으며 더욱이 일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도 내심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번 주중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 의원들은 물론 일부 지역 의원들도 반대가 심하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4단계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사안에 대해 각 지역 자치단체와 지역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